

K-스틸법 합의…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국힘 불참 속 가결

與野 ‘2+2’ 회동 결과로 본회의 처리 내달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 목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사실 없어”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재석 255인,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의 결과 ‘K-스틸법’은 이날 처리될 7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처리됐다. 여야는 나머지 비쟁점 민생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노린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한국 철강 산업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K-

스틸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 외에도 조속현·김학자 변호사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

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다음 달 2일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꺾밧취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본회의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당원 1인1표제’, 野 ‘당심 반영 70%’로 내부 시끌

정청래, 당 대표 연임 사전작업 논란 당 약세·소외 지역 부작용 등 우려도

野 일부 의원 “민심 뒤로, 당심 우선 중도·무당층 확대 속 냉정한 평가 필요”

여야가 각각 전당대회들과 공천률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당원 1인1표제’ 개혁 작업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진행 중인데, 민주당 약세·소외 지역에서 일어날 부작용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을 문제 제기 하는 의원

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주당 당헌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같게 해 권리당원의 주권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60대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표에서 뒤졌지만, 권리당원에서 크게 이겨 당대표에 선출됐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여서 당 대표 연임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윤준중·김영배·이언주·강득구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수 지지세가 높은 영남 지역 등 인구수에 비해 권리당원의 수가 적은 지역에 당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현재 ‘1인1표제’를 당헌에 담는 개정안은 당무위를 통과했고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짓기로 했으나, 당내 반발에 다음달 5일로 중앙위 개최가 연기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후보자 경선률과 관련해 현행 50%인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올리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하면서 하면서 수도권 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심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심을 뒤로 한 채 당심을 우

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40명 중 22명이 참여했다.

나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당심 지지도가 높은 나 의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틀을 미리 정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강조

“野 주장 이유 있을 때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채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을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저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로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빠주기·편드만능공화국’ 예산을 바로잡아 ‘진짜 민생예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총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이재명표’ 예산 4조~5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민생·경제에 필수적인 2조6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동·아프리카 순방 등 국제 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박태홍 기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진심으로 축하”

李 대통령, SNS서 연구진 등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격려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슴이 벅차오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